

# 어르신들 “방역패스가 뭐여?”...광주 식당 곳곳 혼란

### 고령층 인증방법 서투르고 바쁜 식당주인도 일일이 확인 어려워 계도기간 끝나는 13일부터 혼선 가중 우려...노인 위한 배려 필요

“방역패스’라던데, 그게 뭐야? 요즘엔 식당에서도 기계에다 주문해야 하는데 ‘방역패스’는 어디서 해야되나.. 차라리 집에만 있어야지.”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전국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 등 16개 업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면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로,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정보가 연계된 QR코드를 찍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음을 인증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와 같은 인증법에 대해 서툰 수밖에 없다.

고령층은 물론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계도기간임에도 불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아 실제 적용되는 13일부터는 손님이 몰리는 시기에는 ‘대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기마저 나온다.

광주시 서구 지평동에서 죽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실상 방역패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6~12일) 계도 기간이기도 하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포기했다.

A씨는 “지난 6일 가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방역패스 인증법을 아시느냐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더라”면서 “직접 확인하려는데 다른 손님들이 들어다 쳐 포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면 과태료(150만원) 때문이라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게 뻔해 이래저래 걱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이로 된 접종 완료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부터 노인들은 걱정이 앞선다.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김모(79) 할머니는 “내 주위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휴대폰(피쳐폰)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많다”며 “종이로 된 증명서를 챙겨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식당이든 어디든 출입할 때마다 내밀어야 하는 게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령층은 2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모바일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은 53.7%에 불과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74.2%), 저소득층(92.5%), 농어민(69%), 북한이탈주민(84.3%), 결혼이민자(78.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경우 점차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은행, 식당, 카페 등 없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정도지만 노인들은 키오스크에 나오는 정보를 읽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떨어지다보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많다. 사람이라면 다시 물어보면 되지 만 터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키오스크에 물을 수도 없어 두렵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사 무인점포의 증가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한 것도 그러하다. 방역패스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당분간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서관도 방역패스 합니다 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 입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도서관 입장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도지만 노인들은 키오스크에 나오는 정보를 읽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떨어지다보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많다. 사람이라면 다시 물어보면 되지 만 터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키오스크에 물을 수도 없어 두렵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사 무인점포의 증가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한 것도 그러하다. 방역패스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당분간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령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당사 무인점포의 증가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증가한 것도 그러하다. 방역패스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당분간 노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내가 전문가” “잘 아는 사람”...비슷한 수법에 계속 속는다

광주지법 사기범 재판 보니

### 취업·투자 사기 등 피해 잇따라

광주지법 법정에서는 매일 수백 건의 형사 재판이 열린다. 취업·투자 사기, 보이콧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는 가장 빈번히 열리는 형사 재판이기도 하다. 재판과 판결을 들여다보면 사기꾼들 전략과 수법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비슷한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라 믿었더니...=A씨는 자신을 해외 선물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 분야 최고수로 인정을 받아 증권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삼촌에게 투자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들었다. 또 여태껏 10억 이상을 벌여 주변에 인심도 많이 썼다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줬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6억2000여만원을 건넸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고액을 가로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스승 아들이 속일까 했는데...=‘아는 사람’ 영역에 들어온 인물을 잘 의심하지 않는 경우도 피해를 키운다. B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제자 C씨에게 “조상님이 화가나 있어 가정을 이 좋지 않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남편, 자식 모두 죽는다”며 불행을 예고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 시작했다. B씨 어머니에게 자식이 신통력이 있다는 말을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C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7차례에 걸쳐 2억7400만원을 기도비 명목으로 전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액만 이 정도로, 검찰은 애초 B씨가 9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소했다. B씨도 4억 가량 받았다고 인정했다.

중국에서 중의학 등을 공부하며 도를 깨우쳤

다는 게 B씨 주장. 재판부는 일정 기간 중국에 머물렀을 뿐 신통력이나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신당이나 유사한 공간에서 무속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하지만 C씨에게 “자식이 죽는다, 귀신이 들릴 것이다”며 온갖 불행한 일을 예고했고 막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다. C씨가 의심하면 더 강하게 불행을 예고했고 궁지로 몰았다. 매일 기도를 드리고 굿을 하고 천도제를 두 달 내내 지냈다는 B씨 주장과 달리 날 짜, 장소, 방식, 소요 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재판부에 전혀 하지 못했다. B씨는 이 돈으로 30회 이상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이집트 등으로 해외 여행을 다닌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군부대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쳤다다면?

광주지법 “피해 골프장 직원에 국가가 3700만원 배상”

골프장에서 일하던 중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다쳤다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얼마나 져야할까.

피해자측은 2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700만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일하다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사된 총알(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고 튕겨서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옮겨져 정수리 부근에 박힌 5.56mm 크기의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

고 퇴원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A씨는 이날 사고로 10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손상을 입은 점,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사격훈련 과정에서 유탄이 발생한 점, 당시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은 일부 장비가 사격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A씨에게 100일의 입원 기간 발생한 휴업 손해액(1300여만원), 간병비, 위자료 1000만원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측이 주장한 후유장애로 인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